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사업의 성과와 과제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최근 의사·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사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DUR은 2008년 4월 의사가 처방한 동일한 처방전 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사전 점검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다른 처방전 간 교차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비급여 의약품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이후 2016년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이 개정되어 의사·약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동일 또는 금기성분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DUR 제도는 2015년 5월 전국을 공포에 떨게했던 메르스 사태 때 격리 대상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군병원 DUR 정보 연계로 군장병, 군인가족 및 임신중인 여군 등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더불어 2018년 7월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인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발사르탄을 사용한 치료약 회수과정에서 DUR 시스템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DUR 시스템을 통해 문제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DUR 시스템의 실시간 업데이트로 해당 의약품 교환이 99.9%에 이를 정도로 조속히 이뤄졌다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입원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DUR 점검이 아직은 미흡하였고, 제공된 부적절 의약품에 대한 낮은 처방변경률 등은 DUR의 실효성을 저하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DUR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두는 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의사·약사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13권 제2호 주제는 ‘DUR 사업의 성과와 과제’로 DUR 제도 현황과 발전과정 그리고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앞으로 DUR 제도가 의약품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 건강 안전지대 마련에 주축이 되길 기대해 본다. X